통합에 막힌 광주·전남 고향사랑기부…'대체 모델' 과제

작년 상호기부 1억1천여만원…모금액 7.1%
박진한 의원 "새 지정기부·참여방안 발굴을"
특별시 "27개 기초지자체 간 기부 활성화"
답례품 폭 확대…내년도 기금사업 등 마련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광주와 전남 간 고향사랑기부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부경로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박진한 의원은 최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행정통합으로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간 고향사랑기부가 허용되지 않는 데 따른 대체 기부모델 마련을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통합 전에는 광주시민이 전남도에, 전남도민이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었지만 두 지역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이면서 특별시 주민은 특별시 본청에 기부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모금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모두 16억7천687만5천원이다. 이 가운데 양 지역 주민이 상대 광역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1억1천900만원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광주시청 모금액 가운데 전남도민 기부는 4천만원(10.8%·422건), 전남도청 모금액 가운데 광주시민 기부는 7천900만원(6.1%·660건)이었다.

특별시는 통합으로 광역단체 간 상호기부가 제한되면서 본청 모금액이 약 7%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등 27개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기부를 활성화해 특별시 전체 기부 규모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은 하나가 됐지만 지역을 응원하고 돕고자 하는 시민과 출향인의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통합으로 발생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시민과 기업·단체의 참여가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으로 기부 경로가 줄어든 반면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은 넓어졌다. 특별시는 전남 334종과 광주 89종 등 모두 423종의 답례품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각각 남아 있던 답례품 포인트도 통합돼 양 지역 답례품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현재 답례품 체계를 유지한다. 업체들과 체결한 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 데다 통합 이전 기부자가 보유한 포인트의 사용권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금도 하나로 합쳐졌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용하던 기금의 권리와 의무, 잔액은 특별시 고향사랑기금으로 승계됐다. '고향사랑e음' 기부처와 기부 데이터도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됐다.

광주·전남에서 추진해온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이어간다. 전남의 고향사랑마을 활성화와 마을 공동 빨래방, 전남OK 행복밥상, 광주의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과 부모님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특별시는 하반기에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와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광주·전남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형 기금사업 발굴과 답례품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간 본청 상호기부가 어려워진 만큼 기부가 지역 내 시·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내년도 기금사업과 답례품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1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가 열려 김병내 협의회장을 비롯한 27개 시·군·구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제공〉

"전남광주시, 정부 통합지원금 배분해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1회 정기총회

27개 시·구·군에 1조 안팎…사업 자율 추진
부단체장 인사도…김병내 "건의문 조속 제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7개 기초자치단체가 정부의 연간 5조원 통합지원금 가운데 1조원 안팎을 시·군·구에 배분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자율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 건의한다.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남구에서 제1회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지원금 지역상생을 위한 시·군·구 재정 지원'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특별중앙행정기관 사무 이양 경비를 제외한 최대 4조3천500억원에 이르는 통합지원금이 첨단 산업·대형 사회기반시설(SOC)에만 집중될 경우 농어촌 지역이 통합에 따른 실질적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통합지원금을 기초지자체에 배분할 때 단순 인구 비례가 아닌 산업기반·생활 인프라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추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통합지원금의 지역상생을 위한 시·군·구 재정지원'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특별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바뀐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인사권 자율 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종전 광주시는 인사교류 협약을 통해 자치구 부단체장 인사를 1대1 교류해왔다. 전남도 역시 협약 없이 도지사가 부단체장을 임명하고 일선 시·군과 1대1 교류를 해왔다.

협의회는 시·구·군 부단체장 자체 승진과 관련돼 특별시-시·구·군 간 인사교류 협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병내 전남광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통합지원금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은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재정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자본금 2천억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된다

광주관광공사, 전남관광재단 흡수
주 사무소 소재지 정관으로 정해
전남광주시, 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관광공사를 존속법인으로 두고 전남관광재단을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통합에 나선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7일 '전남광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통합공사 출범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남광주관광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정해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도록 했다.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통합 방식은 기존 광주관광공사를 존속시키고 전남관광재단을 흡수하는 형태다.

조례 시행 당시 광주관광공사는 전남광주관광공사로 존속하며 기존 조직과 자산, 임직원의 신분은 통합공사로 승계된다.

전남관광재단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도 통합공사가 넘겨받는다. 재단 소속 직원은 통합공사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시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역시 통합공사가 이어서 수행한다.

통합공사는 관광진흥을 위한 기획·개발·운영을 비롯해 전시컨벤션센터 관리·운영, 관광상품·자원 개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박람회·전시회·컨벤션 유치 등의 사업을 맡는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 무연고·고독사 등 공영장례 추진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장례비용 등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해 공영장례 지원을 추진한다.

17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광주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영장례는 장례비를 포함해 필요한 현물이나 비용을 지원하고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해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특별시는 전남과 광주 각각 운영해온 장례지원제도를 통합해 지원 대상을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서 고독사와 아동학대 사망자 등까지 확대했다.

전남광주 지역 무연고자를 비롯해 사망 당시 통합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고자가 저소득층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장례 기간 음식 비용과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을 통한 인력·장소 지원도 포함되며 화장 비용과 화장장까지 이동하는 교통비, 봉안 또는 자연장 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 규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장제급여를 기준으로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해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하게 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사망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규정했다. /최명진 기자